

차 례

결과보고서 요약문

2018년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 내용

- 1) 당초계획
 -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방향
 - 기대효과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 참여인력
- 2) 실제추진 현황
-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 관련분야 기여도

2. 예산

- 1) 예산 계획
- 2) 실제 예산 집행

3.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기타

4.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결과보고서 요약문

사업기관	문화유산연구소		
사업명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이선복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사업기간	2018.4.1.~2019.2.28	사업비	

1. 사업목표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피상적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의 실제 적용양상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임. 게다가 북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보다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주로 강조됨.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산분야 남북협력사업의 기본인식을 재검토하고 장차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문화유산 관리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사업의 내용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법령의 변천 양상 파악
 - 1946년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 북한 문화유산 관리 원칙 검토
 - 문화유산의 선별적 계승 원칙: 주체성, 력사주의, 과학성
-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 검토 - 혜산시 문화유산 관리 사례
 - 예산, 장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 문제 확인.
 - 유적관리 현장에서 유적보다 최고지도자의 교시가 새겨진 표식비가 중요시됨.

- 역사적 문화유산보다 혁명사적의 중요도가 더 높음.

3. 사업의 성과

- 북한 문화유산 관리 법령 변천의 검토

-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실질 내용은 매우 단순하며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문화유산 관리법령의 제·개정은 문화유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몇몇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전망

-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1960년대 말 수립된 문화유산의 선별적 계승의 원칙이 유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조건에서는 현재와 같이 참담한 수준의 문화유산 관리상황에 변화가 오기 어려울 것임.

-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사업적 가치 검토

- 문화유산 부문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는 탈정치적, 탈이념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류전시, 공동연구를 비롯한 상호협력을 큰 이견 없이 모색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평가 및 그에 따른 학술적 의미의 해석에서 남북 사이에는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의미 있는 실질적 교류는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만 가능할 것임.

- 또한 남북 화해에 따른 SOC 사업이 본격화 된다면, 매장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를 둘러싼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문화유산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물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교류는 다원적이며 중층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문화유산연구소

1. 사업 내용

1) 당초계획

개요

- 사업명: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 기관명: 문화유산연구소
- 총 사업비: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기존 연구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피상적 접근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의 실제 적용양상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은 편임.
- 북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보다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이 주로 강조됨.
- 최근 북한의 문화유산 관계법령이 연속적으로 제·개정됨에 따라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여겨지며 그에 따라 기존에 일부나마 알려져 있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실태는 현재 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목적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유산분야 남북협력사업의 기본인식을 재검토하고 장차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 문화유산 관리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기본방향

- 국·내외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법령을 비롯, 북한의 문화재 관리제도 및 실태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수집함.

- 탈북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각급 박물관이나 중요 문화재의 관리현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황을 전문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진단함.
- 수집된 자료 분석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함.

□ 기대효과

- 북한에서 문화유산 관리가 실제로 어떤 법적 근거 아래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 현황은 그러한 법과 제도에 실제로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통일 시에 직면하게 될 문화재 관리상의 제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방안 강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될 것임.
-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사업의 기초 정보를 마련하게 될 것임.
-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한국고고학을 비롯한 관련 학계에 북한 문화유산의 학술적 활용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 일정별 추진 세부계획

일 정	추진 내용
2018. 4. ~ 6.	국내 유관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탈북인사 섭외 및 인터뷰 진행
2018. 7. ~ 10.	해외 유관기관 방문 및 자료수집 탈북인사 섭외 및 인터뷰 진행
2018. 11.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준비
2018. 12. ~ 2019. 1.	자료 정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2) 실제추진 현황

□ 북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문헌조사

- 국내 유관기관 방문 조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및 기타 대학 방문
 - 북한 문화유산 관계 법령 조사
 - 북한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검토
- 국외 유관기관 방문 조사
 -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및 연변도서관
 - 영국 SOAS, University of London

□ 북한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국내 전문가 자문: 북한고고학 연구 경험자 섭외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고일홍 선임연구원
 -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유용욱 교수
- 국외 전문가 자문: 북한과 공동사업 수행 경험자 섭외
 - 중국 연변대학 고구려발해연구중심 정경일 교수: 북한 사회과학원과 평양일대 공동발굴사업 진행
 - 중국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원 조우연 교수: 북한학계와 소통창구 유지

□ 탈북인사 인터뷰

- 북한에서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했던 탈북인사 섭외: 탈북인 단체, 탈북 언론인 등 접촉
 - 전 북한 혜산시 역사유적감독원 서철 섭외

□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 종합 검토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법령의 변천
 - 1946년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
 -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 북한 문화유산 관리 원칙
 - 문화유산의 선별적 계승 원칙: 주체성, 력사주의, 과학성
-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 혜산시 문화유산 관리 사례
 - 예산, 장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 문제 확인
 - 유적관리 현장에서 유적보다 최고지도자의 교시가 새겨진 표식비가 중요시됨
 - 역사적 문화유산보다 혁명사적이 중요하게 관리되고 있음

3) 사업 내용별 운영 성과

□ 사업성과 (구체적 내용 기술)

- 북한 문화유산 관리 법령 변천의 검토
 - 여러 차례에 걸친 법률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실질 내용은 매우 단순하며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문화유산 관리법령이 제·개정은 문화유산 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한 몇몇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전망
 -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1960년대 말 수립된 문화유산의 선별적 계승의 원칙이 유지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런 조건에서는 현재와 같이 참담한 수준의 문화유산 관리상황에 변화가 오기 어려울 것임.
-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사업적 가치 검토
 - 문화유산 부문에서 남북 사이의 교류는 탈정치적, 탈이념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교류전시, 공동연구를 비롯한 상호협력을 큰 이견 없이 모색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져 왔음.
 - 그러나 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평가 및 그에 따른 학술적 의미의 해석에서 남북 사이에는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의미 있는 실질적 교류는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만 가능할 것임.
 - 또한, 남북 화해에 따른 SOC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매장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를 둘러싼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문화유산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물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교류는 다원적이며 중층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 관련분야 기여도

- 남북협력사업에서 민족 동질성과 같은 문화유산분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대신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실태에 기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 전략의 수립이 가능해짐.
-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제도와 현황에 대한 이해는 북한 문화유산의 이력과 맥락을 유추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남한학계에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2.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1) 자체평가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남북협력사업에서 문화유산분야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 문화유산 관리제도와 현황 파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
 - 특히 실제 관리 현황은 문헌에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종사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화유산분야에 관계하였던 탈북인사와의 인터뷰는 본 연구 진행에 필수적임.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과 연구계획 및 구성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사업의 효율성
 - 사업의 효율성이 투입비용 대비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때, 본 사업에서 국·내외 유관기관 방문 및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탈북인사 인터뷰 등 다방면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사업목적에 맞는 양질의 문헌정보와 증언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효율성은 높았다고 할 수는 없음.
 - 이는 북한 정보의 폐쇄성에 기인하며, 게다가 문화유산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창구는 더욱 좁은 편이기 때문. 다만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

런 다양한 정보수집 통로를 경험하였으며, 관련 전문가 및 탈북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소기의 성과는 존재함.

- 통일기반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단기적, 가시적 성과가 아닌 남북 사이의 관계개선, 협력 나아가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본 사업의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사업의 영향력

- 남북 사이의 교류에서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남한사회의 막연한 기대감을 견어내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협력사업전략 및 대처방안의 수립을 주문함으로써, 향후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본 연구를 통해 북한 문화유산 자료의 수집, 보존, 복원 정황에 대한 검토가 가능해짐으로써 관련학계에서 북한자료에 대한 학술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통한 협력사업이 구상 및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는 꾸준한 자료조사와 탈북인사의 증언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는 향후 북한 문화유산 관련 자료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한계

-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였으나, 자료 확보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그에 따라 북한 문화유산분야에서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 제기에 그친 경향이 있음.

○ 보완할 점

- 북한 문화유산 관련 최고지도자의 언행 자료 수집
- 북한 문화유산 관리 법령의 구체적인 시행령 확보.
- 평양지역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관련 탈북인사 섭외

□ 향후 계획(내년 계획)

-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 2018년도 사업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 관리 법령과 현황의 검토 필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나,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문화유산 관리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보다는 피상적, 단편적인 검토에 지나지 않았음.
 - 다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수집이 미미했던 것으로 보아, 1년 이하의 단기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는 장기과제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자료조사와 탈북인사 증언 확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에 대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언행자료(교시, 현지도 등) 수집 및 분석
 - 2018년도 연구사업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지도자의 교시, 현지도 등이었음이 확인되었음.
 - 북한에서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문화유산 관리제도의 명시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은 초법적 효력을 지니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짐. 또한,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까지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내용상 명확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한 문화유산 관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추적을 통해 북한 문화유산 관리 원칙과 제도의 이면을 파악하고자 함.
 - 대상: 북한 노동신문, 중앙연감, 김일성·김정일저작집 등에 소개된 북한 최고지도자의 문화유산 관련 언행

2) 건의사항

□ 사업 진행 관련

- 1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다 보니 장기적 운영을 예상하지 못하고 단기적 성과에 매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장·단기 사업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 인문학연구원 소속 기관은 인문학연구원의 법인회계 카드를 미리 청구하여 사용하고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업단위별 연구비카드 발급을 희망함.

□ 기타

- 개인 연구자 수준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 따라 통일평화연구원의 공식·비공식 대북정보 채널 공유 필요.
 - 두만강포럼과 같은 국제 행사 정보 공유
 - 통일평화연구원의 MOU 기관 소개
 -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지식인 소통 채널 등
- 결과보고서 서식 중, 자체평가 부분에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 평가항목의 수정과 조정 필요하다고 여겨짐.

3. 관련자료

□ 대표적 사업 실적

- 2018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발표
 - 일시: 2018. 11. 27. 10:00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 참가세션: 문화·예술·스포츠
 - 발표제목: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 발표자: 고고미술사학과 이선복 (연구책임자)
 - 토론자: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유용욱